월간 노동리뷰 | 2009년 8월호 pp.1~2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포커스

일자리 대책의 정비 방향

허 재 준*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을 계기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 경제위기로 파급되었다. 2008년 4/4분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5.6%, 연율로 환산하면 -22.4% 감소하여 OECD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취업자수도 단지 그 증가율이 둔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12월에는 절대수 자체가 1.2만 명 감소로 돌아섰다.

자연스럽게,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2009년에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대규모 도산과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1998년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선진국 모두가 금융위기의 여파에 휩싸여 경기침체의 골이 깊을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경제위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월평균 약 32.1만개에 달하는 희망근로 등의 단기일자리사업, 약 14.4만개에 달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약 5.4만개의 청년인턴 일자리 외에도 월평균 약 10.8만 명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 61만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2008년에 비해서 그 수혜자수가 월평균 36.5만개나 늘어난 파격적인 규모이다.

3/4분기도 절반이 지난 지금 경기상황 점검과 함께 상반기의 일자리 대책을 되돌아보고 하반기와 내년의 정책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년인턴사업은 청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경력개발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마다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다르고,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 인턴사업별 사업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 인턴은 취업연계 가능성도 낮은 데다가 책임 있는 직무를 맡기 어려워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정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은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조·건설업 부문 등의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사회정책연구본부장(hurjj@kli.re.kr).

고용부진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로 기능해 왔으며, 저소득층, 노인·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적합한 일자리 공급원으로도 기능해 왔다. 정책범주 설정, 총괄·조정, 성과분석,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의 전반적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경제위기를 맞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이 지원하는 일자리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관리안 마련, 중복 조정, 전달체계의 독점성 극복, 경과적 일자리로서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제한된 재원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소득이전을 달성한 의의가 크다. 그러나 당초 목표집단인 최저생계비 120%, 자산 1.35억 이하의 저소득계층보다는 추가소득을 원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가 지배적이고, 지역의 영세자영업자 소득지원 효과를 겨냥하여 도입한 유효기간 있는 상품권제도는 여전히 행정수요 증가의 원천이 되며, 참여자들이 불만 내지 이의를 제기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참가가 50%에 가까워 산재우려로 인해 노동강도를 높일 수 없는 탓에 희망근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수범사례만을 지속하는 방향에서 정비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중 일부 지속관리가 필요한 청·장년층 참여자를 취업지원 패키지사업과 연계하는 등 희망근로 마무리 단계에서의 참여자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근간으로 하여 과감하게 시행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사중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상반기에 최소한 9.0만 명(월평균) 이상의 고용유지 및 창출 효과를 낳고 적어도 2.3만 명의 실업자 감소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가 호전되면 그 효과도 제약될 것이므로 지원금제도를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기가 다시 악화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휴직·휴업 등의 경우가 아닌 교대제 전환, 학습훈련을 통한 고용유지의 경우에 한 해 연장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와 금번의 경제위기에 재정을 통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충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과 연계되지 않은 채 재정을 통해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취약계층의 실직과 빈곤의 구조화 추세를 막기 어렵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피보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생계 지원을 결합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단기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등의 기존의 단편적인 사업들은 통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기를 회복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위기 후를 대비하는 정책 중 사회정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분야이다. KLI